

광주시교육청 인사·구매 조사기로

시의회, 모든 학교 대상 최근 5년 수의계약 현황·에어컨 납품 등

광주시의회가 시 교육청의 인사와 최근 불거진 시스템 에어컨 등 물품 구매 의혹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의회의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육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희곤(교육위원·북구) 위원장과 서정성(민주·남구 2) 의원 등 조사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간담회를 하고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27일 본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원장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29일 첫 간담회를 하고 조사대상 범위와 일정, 자료요구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27일부터 6월30일까지 최근 5년간 시 교육청 산하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현황을 조사하고, 2009년 약 7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 납품 등 각종 물품 구매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해당 기관을 상대로 현장 확인 조사를 벌인 뒤 필요할 경우 중

인 등 관계인 출석을 요구해 의견진술도 등을 예정이며, 조사과정에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또한, 학교회계와 시 교육청 회계 간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사와 계약제도 등 각종 비리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이밖에 시 교육청과 동서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학교회계 결산서와 목적사업비 집행실태를 분석하고 인사제도의 문제점도 점검할 방침이다.

정희곤 교육위원장은 "최근 일선 학교에서 계약과 납품을 둘러싼 비리가 불거지는 등 교육계의 고질적인 납품비리 의혹이 있어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했다"라며 "계약과 물품 구매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며, 필요하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지난 2006년 신설학교 기자재 납품 의혹과 관련해 조사 한데 이어 두 번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교육감 모교 예산 5억5천만원 삭감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추경 1조5천억 수정안 의결

광주시의회 예 산 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장회국 광주시 교육감의 모교 예산 지원 논란을 빚었던 광주고 등학교 관련 예산 5억5673만1000원을 삭감했다.

광주시의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2011년도 제1회 광주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갖고 시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안 가운데 9억7110만5000원이 삭감된 1조5150억3063만5000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삭감 예산 중에는 광주고의 기숙사 구조 변경 5억173만1000원, 펜스 공사 3000만원, 주차장 및 스탠드 지붕 공사 2500만원 등 장 교육감의 모교 예산 5억5673만1000원이 포함됐다.

앞서 시 교육청은 올해 추경에서

광주 공립고등학교 12곳에 편성된 45억7000여만 원 중 37.6%인 17억 1700만 원을 교육감의 모교인 광주고에 배정해 선심성 배정 비난을 받았으며, 교육감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시민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삭감예산은 제외하더라도 광주고에 11억6160만 원의 예산이 배정돼 특혜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시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감의 모교 예산 물

아주기는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잘못된 일"이라며 "철저한 점검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광주고 예산 이외에 광주일고 기숙사실 개조 및 노후시설 개보수 1억원, 북유럽 교육정책 담당 9000만원, 광주진흥고 급수 배관 교체 5000만원, 살레시오 여고 기준 교사철거 및 개축 3000만원, 풍 암고 급식실 휴게시설 신축 4539만원 등을 삭감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색깔있는 농어촌 마을' 1만곳 만든다

정부는 침체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의 잡재적 자원을 발굴, '색깔있는 마을' 1만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3년까지 농어촌의 변화를 이끌 10만명의 리더를 육성하고 100만명 재능기부자 를 확보하는 한편 2만곳 이상 도농연대를 추진해 도시와 농촌간 연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3년까지 농어촌의 변화를 이끌 10만명의 리더를 육성하고 100만명 재능기부자 를 확보하는 한편 2만곳 이상 도농연대를 추진해 도시와 농촌간 연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3년까지 농어촌의 변화를 이끌 10만명의 리더를 육성하고 100만명 재능기부자 를 확보하는 한편 2만곳 이상 도농연대를 추진해 도시와 농촌간 연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을 빼대로 한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인 '스마일 농어촌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운동은 농어촌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도시민이 대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 국민운동 성격으로 자율, 참여,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고 유장관은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체육·관광·전통문화·음식·축제·특화산업 등 각 마을이 지난 잠재적 자원을 발굴해 차별화함으로써 전국에 1만곳의 색깔있는 마을을 만들기로 하고 우

선 2013년까지 3000곳을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농식품부는 2013년까지 창조적 사고와 전문기술을 가진 농어촌 핵심리더 10만명을 육성해 마을 발전을 견인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산업·경영·경관·계획·공학·금융·디자인·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자 100만명을 확보, 이를 필요로 하는 농어촌과 연결해주고 전국적으로 2만곳 이상의 도·농연대를 추진해 도·농간 연대를 활성화하기

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운동의 성공적 전개를 위해 중앙에 정부, 농식품단체, 학계, 재계, 문화계 등을 대표하는 '국민운동진흥위원회'를 5~6월중에 구성하고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이 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 방침이다.

또 지방에는 시·도·시·군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현장포럼과 마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역대학교에 '농어촌 활력창출 지원센터'를 둘 계획이다.

/연합뉴스

'스마일 농어촌 운동' 10만명 리더 육성도

1. 홈페이지제작은 기본! 모바일홈페이지 까지!

도메인

호스팅!

로고 디자인

컨설팅!

홈페이지만 만들면
이 모든것이 무료!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상담 폭주!
(아이폰, 안드로이드 용)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KDB빌딩 1904호

010-2637-9358

상담문의
마블아이엔씨

www.ah-english.com

원어민영어회화
압구정영어가 한다!

여? 압구정이들(고소득자)은 그렇게 하고있다!!
수강료는 브루너를 합니다!
(월15만원/매25분수업)

압구정 원어민전용
전화영어·화상영어
070-7433-0594

법인중소기업 회생 안내!

1. 법인회생이란?

- 장래 기업이치는 있으나 과도한 부채 또는 보증채무로 인해 현재 경영상황 악화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힘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을 소생 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 2. 신청대상 요건은?
- ① 현재의 지속적인 수익은 있으나 과도한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
- ②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사업장에 입류, 기압류, 근저당 경매절차등 강제집행의 위험이 있는 기업
- ③ 민기 도래의 이율이 예정되어 해당 이율로부터 어려움에 처한 기업으로 신용채무 5억원 이상, 담보채무 10억원 이상 법인 중소기업체 개인사업자 또는 전문직 종사(의사·한의사·약사...) 공무원 등
- 3.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 ① 원칙적으로 경영권 및 대표자 사직이 유지됩니다.
- ② 회사의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 제한 및 금지되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내용
 - 근저당권자의 일의경매 증지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에 따른 강제집수 증지 및 회생계획안으로 상환
 - ③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를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유예, 감면 등이 가능합니다.
 - ④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하여 직원들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⑤ 주요 상거래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어서, 연쇄도장을 막고 계속 사업을 위한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 ⑥ 법인의 보전처분 결정 이후에는 교환에 회부된 담화수표는 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경매가 진행중인 기업체도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 * 부채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김길수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전화상담은 물론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 * 철저한 신문보장과 비밀을 약속 드립니다.

변호사 김길수법률사무소 062-226-2785
기업회생팀 010-5879-8300

3군 사관학교장에

민간인 임명 추진

국방부, 법령 개정키로

국방부는 26일 육·해·공군사관학교장에 민간인과 예비역 장성을 임명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사관학교장에 현역 장성을 임명한다는 '사관학교설치법' 조항을 개정해 민간인과 예비역 장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25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군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관학교설치법 개정을 의결했으며 각군 참모총장들의 이견은 없었다"면서 "다음 달 말 국회에 상정해 6월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관학교장에 민간인과 예비역을 임명하는 방안은 지난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논의됐다.

한편 군무회의에서는 상부지휘구조 개선을 빼내고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으나 부칙에 개편 완료시기는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6일 낮 평양공항에 도착해 소녀로부터 흰영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평양 도착 카터, 김정일 면담 가능성

28일까지 체류후 서울행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디 엘더스(The Elders)' 회원들이 2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11시7분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를 단장으로 하는 엘더스 대표단이 26일 전용기로 조선중앙통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현반도를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 창건 79주년(4·25)을 맞아 김정은과 함께 공군군 가합장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보도돼 현재 평양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카터 전 대통령을 면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디 엘더스 일행은 28일까지 서울을 방문한 뒤 서울로 이동해 방북 결과를 설명한다.

또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KTX 경제권연구소장은 'KTX와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KTX 경제권 개발 전략으로 교통거점화, 지역특성화, 도시발전 연계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조운준 조선대 교수·사회로 임영길 호남대 교수, 노경수 광주대 교수, 김대현 전남대 교수, 윤관 시 교통정책연구실장, 정하숙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